

June 2026
No. 385

INSS

전략보고

한국과 동북아 전략적 삼각관계: 중일갈등과 '강한 일본'을 중심으로

주동진
joo2868@inss.re.kr

- I. 서론
- II. 미중갈등과 중일갈등의 장기화 · 상수화
- III. 일본의 '강한 일본'과 한일관계
- IV. 결론 : 한일관계 관련 기회요인과 도전요인

한국과 동북아 전략적 삼각관계: 중일갈등과 '강한 일본'을 중심으로

I. 서론

II. 미중갈등과 중일갈등의 장기화·상수화

1. 역내 갈등과 전략적 삼각관계의 대두
2. 미중일 전략적 삼각관계 현황
3. 한중일 전략적 삼각관계 현황

III. 일본의 '강한 일본'과 한일관계

1. 역내 역학관계와 '강한 일본' 간 상관관계
2. 일본 정세와 우경화 지속가능성
3. 한일관계와 협력·경쟁의 이중주

IV. 결론 : 한일관계 관련 기회요인과 도전요인

한국과 동북아 전략적 삼각관계: 중일갈등과 '강한 일본'을 중심으로

저자 | 주동진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동북아 공간을 구조적 틀로 인식 △구조 속 전략적 삼각관계 메커니즘을 이해 △전략적 자율성을 위한 기회요인과 도전요인 도출 등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중갈등·중일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중동사태까지 증첩되며 역내 안보와 지정학적 균형에 대한 우려·긴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먼저, 미국은 서반구·세력권 전략 등을 내세우며 동맹·우방에 부담의 분배와 전략적 유연성 관련 동의·지지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 등 반서방 세력 결집에 집중하며 역내 주도권 확립·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중일갈등과 관련해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대내외 레버리지를 확충하고 이를 기회로 삼아 '강한 일본' 행보를 가속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강한 일본' 행보는 그 내용과 전략적 함의의 측면에서 한일관계 관련 딜레마로 비화할 수 있다. 관심과 경계가 필요하다.

우리가 한미일·한중일 삼각관계를 대상으로 한일관계를 우호적으로 견지·견인하려는 시도는 전통적·연속적 측면에서 분명히 유효한 선택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지속가능성은 자동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우리가 현재 △미국의 전력 분산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 △일본의 과거사 회피와 개헌 시도 등에 직면해있음을 유념해야만 한다. 우리의 일관적·전략적 행보를 위한 고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가 한일관계와 서틀외교를 활용해 △한미·한중관계 관련 리스크 관리·극복 △전략적 레버리지 확보 △중견국 연대전략 추진 등에 있어 유의미한 성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중일갈등, 미중갈등, 우경화, 전략적 삼각관계, 중견국

I 서론

- 동북아 주요국 간 긴장·경쟁이 점점 고착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과 한일관계에 여러 외교·안보적 변곡점을 초래
 - 미국이 제시한 '서반구 세력권(spheres of influence) 구축' 목적의 국방전략으로 인해 기존의 글로벌 질서·균형에 유동성·불확실성 발생
 - 더불어 미중갈등과 '역내 힘의 공백 가능성' 관련 우려가 점증하는 가운데 일본발(發) '대만유사=존립위기사태'에 따른 중일갈등도 계속
 - 반면 인접국·경쟁국·협력국인 일본은 이를 기회로 '강한 일본'이라는 우경화 프레임을 구축·추동하며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에 속도
 - 즉, 미중갈등·중일갈등과 일본발(發) '강한 일본' 행보가 동북아 안보 구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전략·정책 관련 상수로 부상·고착

- 중일갈등과 '강한 일본'이 우리나라 외교·안보에 미칠 수 있는 파장과 관련해 그에 대한 통시적 분석과 유효한 대응 전략 마련이 긴급요
 - 일본의 우경화 행보 가속은 다카이치 내각이 '보통국가化'를 목표로 하는 과정에서 한일관계와 서틀외교에 부정적 영향력을 투사 가능
 - 일본의 우경화 추이는 대내적 측면에서 지지층의 지지·결집을 위한 민족주의적·포퓰리즘적 행보와 직결되며 나아가 대외적 측면에서도 한일관계와 한미일 연대·공조를 대상으로 한 불안정을 야기 가능
 - 이는 우리의 미중일·한중일 전략적 삼각관계에서의 전략적 레버리지 위축과 연결되며 안보 비용 상승과 이해관계 위축으로도 비화 가능
 - 즉, 미중갈등·중일갈등·한일관계를 일괄할 수 있는 통합적 분석 긴급요

- 본 전략보고는 한반도 주변 유관국 간 역학관계를 전략적 삼각관계에 투영해 분석·진단하고 더불어 일본의 '강한 일본' 행보를 대상으로 한일관계 관련 기회요인과 도전요인을 도출·점검하는데 초점
 - 중구난방으로 난립하는 여러 거점별·시기별·분야별 전략을 국가전략 일원화·효율화의 측면에서 통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논거가 부족
 - 한반도 주변 지정학적 관계 현황을 매번 갱신해야만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 관련 상황인식과 그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 진단 불가결

- 역내 정세 관련 기회요인과 도전요인을 도출·평가함으로써 지정학적 기회요인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수 있는 전략적 대비 태세 구축에 일조
- 또한 유관국의 국제정세 관련 인식과 전략적 스탠스를 평가하고 그 복합적 연계 구조를 삼각관계 틀에서 가시화·파악, 이를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중간재이자 촉매로서 정형화·활용하는 데에도 일조
- 본 고의 한국형(型) 전략적 삼각관계 모델이 유효한 거시적·중장기적 분석 도구로서 향후 점진적으로 정착·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

II 미중갈등과 중일갈등의 장기화·상수화

1. 역내 갈등과 전략적 삼각관계의 대두

■ 미중갈등·중일갈등의 계속과 역내 갈등 구조의 고착

- 미중갈등이 동북아·인도-태평양을 배경으로 전방위에 걸쳐 영향력을 투사, △경제 △외교 △정치 △규범 △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작동
 - 역내 전통적 갈등 구조가 재부상하는 가운데 미중 간 경쟁·대치도 이에 편승 중, 이후 '통제된 장기전' 형태로 안정화될지가 관건¹
 - 실제로, 미중갈등은 양국 간 군비경쟁과 함께 △중동사태 △러-우 전쟁 △미국 우선주의 △거대주의적 동맹관 △중일갈등도 포괄, 갈등의 구조적 연속성·확장성까지 견비하며 악화일로를 거듭²
 - 특히 중일갈등이 미중갈등의 악순환 가운데 발발·장기화하며 역내 문제해결 프로세스와 중재·타협 가능성의 약화를 가일층 심화
- 미국이 강조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담긴 함의와 관련해 이해 분분, '전략적 부담의 분배인가? 전가인가?' 등 불확실성의 고조·확산³
 - 미국이 2025년 11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대(對)중국 견제 동참 △국방비 증액 요구 △동맹 현대화의 필요성 △인도-태평양 주도권 견지 등을 누차 반영·강조
 - 반면 2026년 1월 발표한 국가방어전략(NDS, National Defense Strategy)에서는 △본토 방어 △서반구 세력권 공고화 △동맹국의 재래식 방어 관련 자주적 책임 △전략적 유연성 등을 제시·강조

1 Adam P. Liff and G. John Ikenberry, "Racing toward Tragedy? China's Rise, Military Competition in the Asia Pacific, and the Security Dilemma," *International Security* 39-2 (2014), pp. 68-69.; Hal Brands and John Lewis Gaddis, "The New Cold War: America, China, and the Echoes of History,"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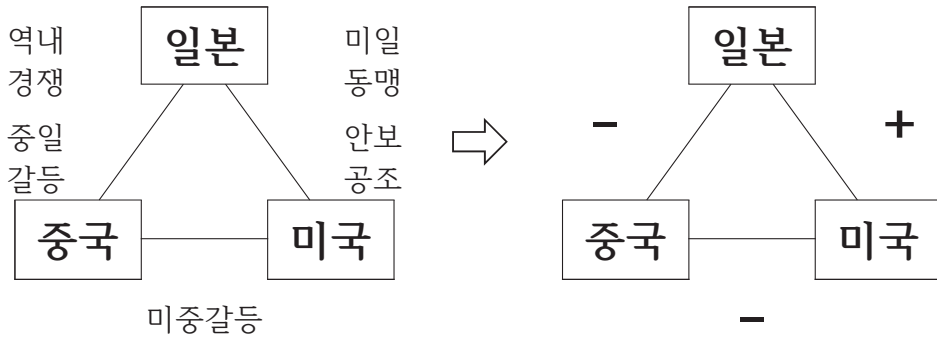
2 U.S.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ecurity Strategy* (2019).; U.S. State Department,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 (2019).; U.S. Department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Annual Report to Congress* (2024).

3 U.S.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25* (2025).; U.S. Department of Defense, *National Defense Strategy 2026* (2026).

- 즉, 미국이 △인도-태평양의 주도권 △서반구 세력권 등을 동시에 추구, 이에 장차 '동맹에 역할·책임 요구'의 결과 발생 불가피
- 현재의 '미국 우선주의'는 과거 '동맹 중심 규칙 기반 질서'와 상이, 이는 동맹·우방의 '힘의 공백에 대한 우려' 자극 불가피⁴
 - 각국은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존속하고 미중갈등과 연쇄할수록 국익의 개별적 측면에서 자력경쟁·각자도생을 추동 불가피
 - 문제는 각국의 책임회피(buck-passing)·현상유지(status-quo) 등 관련 대응 전략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상호 간의 불협화음
- 역내 갈등 구조의 장기화·상수화와 전략적 삼각관계의 성립·작동
- 대(對)미중갈등 관련 한미·한일·한중·미일·중일 관계들 속 긴장 고조
 - 자유주의적 질서보다 탈(脫)·탈(脫)냉전적 질서에 부합하는 각국의 '고(高)비용조차 감수하는 리스크 회피' 행보가 갈수록 증대·확산
 - 역내 각국의 개별적 '입체적 헤징(hedging)'의 측면에서 △안보적 방기(abandonment) 리스크 통제 △경제의 안보화 △전략적 공간 확보를 통한 자율성 제고 등이 상호 간에 경쟁적으로 발생
 - 여러 국가의 제각기 다른 레버리지·헤징 전략에 의해 역내 안보 긴장에 따른 여러 형태의 '전략적 삼각관계' 성립·작동
 - 특히 미중일·한중일 간 전략적 삼각관계가 동북아·인도-태평양의 지정학적 측면에서 대두, 유관국 간 역학관계에 영향력을 투사
- 각국은 미중일·한중일 간 전략적 삼각관계에서 상호 간에 '전략적 비교우위' 지위를 쟁취·유지하기 위한 경쟁·마찰을 반복·감내⁵
 - 다음의 [그림 1]은 미중일 간 전략적 삼각관계를 배경으로 3국 간의 역학관계를 종합적으로 도식화한 결과

4 Leonard Greenhalg, "Managing Conflict," *MIT Sloan Management Review* 27-3 (1986), pp. 45-61.; Stephe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pp. 17, 21-22, 121.; Thomas J. Cristenson and Jack Snyder, "Chain Gangs and Passed Bucks: Predicting Alliance Patterns in Multipolar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4 (1990, Spring), p. 138.

5 주동진, "한국의 대북정책과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 『국제정치논총』 58-4 (2018).



※ 디트머(Dittmer)의 '전략적 삼각관계' 모델⁶

△삼자공존관계 : menage a trios	- 3국 간의 공조·연대를 통한 수평적 관계 - '힘의 쓸림' 현상 부재
△낭만적 삼각관계 : romantic triangle	- 2개국이 다른 남은 1개국을 대상으로 '우방 확보' 경쟁 - '힘의 쓸림' 현상 발생, 1개국의 '전략적 비교우위' 발생
△안정적 결혼관계 : stable marriage	- 2개국이 다른 남은 1개국을 압박·견제 - 2개국 간 공조·연대 지속, 1개국의 고립·이탈 시도 발생
△역학관계의 유형	- '·': 정체, '+': 협력, '-': 갈등 - 그 외의 유형은 3가지 중 하나의 결과로 귀결될 때까지 아직 유동성이 남아있는 '과도기적 국면' 유형에 해당

[그림 1] 미중일 간 전략적 삼각관계와 대(對)중국 '안정적 결혼관계'

출처 : 필자 편집

- 특히 '전략적 비교우위' 국면은 중견국에 있어 전략적 자율성을 위한 기회요인이자 필요조건에 해당

6 Lowell Dittmer, "The Strategic Triangle: An Elementary Game-Theoretical Analysis," *World politics* 33-04 (Jul., 1981), pp. 486-487, 489-490.; 주동진, "센카쿠열도와 美-日-中 삼각관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략보고」 통권 327호 (2025년), p. 12. 디트머(Dittmer)는 '국가 간 상대적이고 전략적인 우위'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전략적 삼각관계' 모델을 구축·제시. 국가 간 관계를 △우호적(positive)·△적대적(negative) 안전 △상호 간의 대칭적(symmetrical)·비대칭적(asymmetrical) 관계 △가치(value) △관계(balance) 등을 통해 평가·구별.

7 Harsh V. Pant, "The Moscow-Beijing-Delhi 'Strategic Triangle': An Idea Whose Time May Never Come," *Security Dialogue* 35-3 (2004).

2. 미중일 전략적 삼각관계 현황

■ 미중갈등 속 중국·일본의 상황

- 미중갈등 향방에 실리는 부하가 가중되는 가운데 중동사태까지 발생, 동북아 안보 구조 속 극적 전환에 대한 기대치 갈수록 하락

- 미중갈등이 미(美) 트럼프 1·2기에 걸쳐 악화·지속, 나아가 미국이 북·중·러 삼각관계 와해에 실패를 반복함으로써 히토류·핵·대만 등 대(對)중국 협상 관련 난항 또한 미해결된 채로 잔존
- 이에 미중 간 'Tit-for-Tat' 국면이 역내 여러 거점에서 만연하며 미중갈등의 유효기간을 계속 연장, 더불어 동맹·우방이 '강제성'에 직면하며 전략적 자율성이 침해되는 현상도 빈번히 발생
- 미중갈등 자체가 일종의 촉매제·레버리지로서 성립·작동하는 현상 갈수록 심화, 민감 현안들의 증가와 그에 따른 상호 간 연쇄반응 및 복합적 효과 또한 갈수록 증가
- 즉, 중국의 살라미 전술과 미국의 김빠기 전술 간의 충돌에 따른 안보·경제·기술·에너지 등 다방면에 걸친 경쟁의 지속 유력 전망, 지금의 국면에서 '전략적 휴전 및 갈등 관리' 이상의 성과 난망⁸

- 미중갈등 속 미일관계는 미국의 역내 대(對)중국 억제 행보를 위한 안보 기축(main-axis), 여기서 일본은 역외국인 미국의 '거리의 제약'을 완화해 주는 대(對)중국 역내 핵심 거점국의 역할을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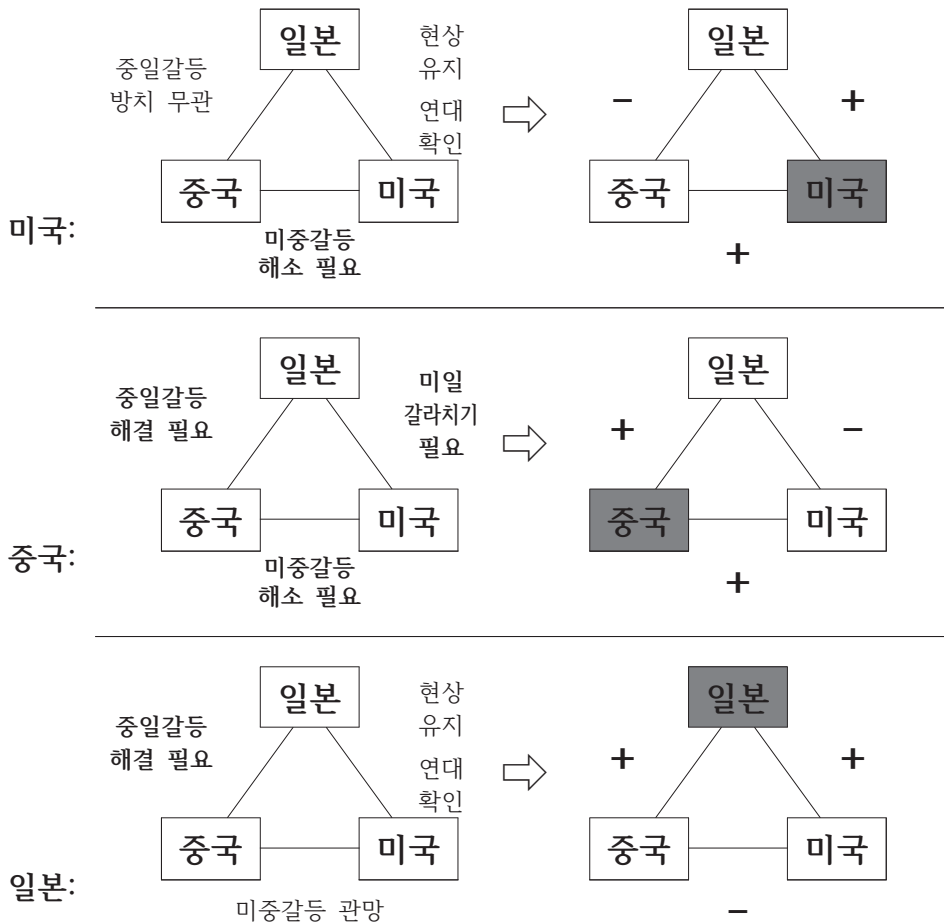
- 미중갈등은 '패권경쟁 속 역내 주도권 경쟁'을 배경으로 동북아 주요국들에 미중 간 양자택일의 안보 딜레마를 강요
- 이에 미일동맹은 전통적인 공조·연대를 견지하며 다소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순항 국면 유지에 노력, 반면 중일갈등은 미중갈등의 향방에 그 결과가 유보·종속된 채로 현상유지 국면에 함몰·잔존
- 여기서 일본은 중일갈등을 자국의 전략적 행보를 위한 명분으로 활용하며 '전수방위→자주국방' 전환 행보를 추동·강행
- 즉, 미중일 간 삼각관계 상태가 당분간 정체·유지될 가능성 다대

■ 미중일 전략적 삼각관계 속 '경우의 수'

- 미중일 간 전략적 삼각관계는 현재 상기(上記)의 [그림 1]과 같이 중국이 견제·억제되는 미일 간 '안정적 결핵관계'를 형성

8 살라미 전술은 국가의 강한 군사력을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장기적인 전략적 목표를 위해 점진적으로 관련 행보를 지속해 나가는 전술. 반면 김빠기 전술은 선제적으로 상대국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지연·실패시키기 위한 전술. 여기서 중국은 지정학적 주도권 확보의 차원에서 △역내 지위·위상 고취 △역내 안보적·지정학적 균형의 균열 △Status-Quo를 추구하는 타국의 수적·개입 시도 유도 △타국의 '군사적 경계·압박'을 통한 정략적 명분 확보 △해당 영역 관련 '직접적 이해관계자' 지위 확보 등의 전략적 목표를 향한 살라미 전술에 몰두 중.

- 각국은 전략적 삼각관계에서 '전략적 비교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 로맨틱 삼각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각각 고안·시도
- 각 달성 조건에 △미국→'미중갈등 해소' △중국→'미일 갈라치기' 및 '미일과의 관계 개선' △일본→'중일갈등 해소' 등이 존재
- 미중일 3국 각각의 전략적 비교우위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2]와 같은 경우의 수들과 그에 따른 각각의 필요조건을 도출 가능
- 미중갈등이 양국 간 경쟁·대치를 통해 재구축되는 과정에서 향후 다양한 행보들이 발생·충돌하며 해당 국면의 전환을 유발할 것



[그림 2] 미중일 각각의 '로맨틱 삼각관계'와 그 달성을 위한 필요조건

출처: 필자 작성. (■는 각국의 전략적 비교우위 확보 상태를 의미)

- 미중일 모두 각각의 기회비용을 투입·소모해야 하는 가운데 각국의 '비용 대비 선택·집중' 인식 관련 거시적 방향성에 대한 진단 개요
 -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양보 불가여도 성과는 불가결한' 상황, 전략적 비교우위를 위한 '대(對)중국 거래' 타진·반복 선택 불가피
 - 반면 중국은 대(對)미국·일본 관계관리가 전방위로 필요한 가운데 기회비용 대비 성과 난망, 이에 '대(對)미국 관계 재설정'에 초점
 - 여기서 일본은 미중갈등 해소에 따른 중일갈등 해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대(對)중국 우방·연대 확보' 전략이 불가결, 또한 한편으로는 이를 '강한 일본' 견지를 위한 정략적 기회로도 활용

3. 한중일 전략적 삼각관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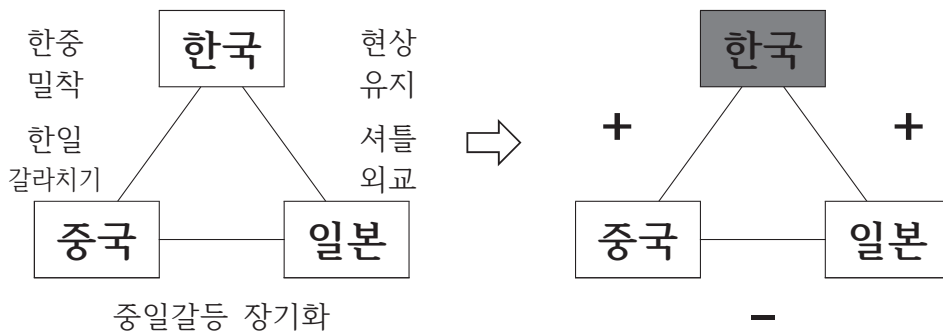
■ 한중일 상호관계 속 중국·일본의 상황

- 역내 삼각관계 속 고립 회피를 위한 중국과 일본의 대(對)한국 유인 시도가 점증하는 추세, 중일 각각의 '갈라치기' 시도 또한 점증 중⁹
 - △한한령 완화 △서해 구조물 일부 이전 △공급망·투자 경제협력 △민감 현안 원론적 관리 등 중국의 대(對)한국 관계 해빙 시도가 점증, 다만 중국의 대(對)한국 후발적·수동적 태세에는 유념
 - △서틀외교 고착화 △경제안보·기술안보 공조 시도 △정치권·민간 교류 △대(對)미국 공동 대응 등 일본의 대(對)한국 현상유지 기조 견조, 다만 일본의 부차적 접근과 민감 현안 양보 부재에는 유념
- 2026년 초반의 '한중-한일 연속 회담' 국면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끼임 상태' 입지 또한 가시적으로 표출·부각
 - 중일갈등은 우리의 지정학적 안보 지형에 큰 영향 파급 불가피, 양국의 유인·견제가 상호 간에 증척·충돌하는 가운데 균형 긴급요
 - 한일·한중 관계 속 중간지대 확보를 위해 대(對)중국·일본 대응 관련 이중잣대 발생에 경계하며 상황인식·관계관리에 매진 필요

9 먼저, 중국은 △'하나의 중국' 준수 요구 △과거사 반성과 군국주의 비판 등 대(對)일본 역사 문제 관련 공감 요구 △미국의 일방주의·보호주의·거래주의 비판 △다자주의에 따른 개방·연대 중요성 등을 토대로 대(對)미일 관련 한국의 이격을 유도. 다음, 일본은 중국의 행보를 한일관계 속 균열을 목표로 한 기간질 시도로 폄하·경계하며 △한일 간 자유주의·민주주의 가치관 공유 △양국 간 안보·경제·문화·기술 영역에서의 협력 가능성 △한미일 간 전략적 연계 △대(對)북한 공조 등을 강조.

■ 한중일 전략적 삼각관계 속 '경우의 수'

- 한중일 전략적 삼각관계는 △미중일 전략적 삼각관계 △미중갈등 △중일갈등 등이 외생적 변수로 작동하는 구조 속에서 성립·작동
 - 현재 한중일 전략적 삼각관계는 △한중관계 회복 △한일관계 견조 △중일갈등 등에 따른 대(對)한국 로맨틱 삼각관계 국면에 진입, 이에 우리나라의 대(對)한중일 전략적 비교우위와 레버리지 발생
 - 단, 관련 전략적 비교우위와 레버리지가 외생적 변수인 미중일 전략적 삼각관계로부터 '충위적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에 가시적 및 실제 성과로 환원되지는 못하는 상태, '정체 국면' 평가 가능
 - 이에 △미중갈등 향방에 따른 '연쇄→경색→정체' 추이 △외교적 위상·레버리지 제고 가능성 등이 혼재하는 국면에 대한 대비 긴급



[그림 3] 한중일 전략적 삼각관계와 대(對)한국 '로맨틱 삼각관계'

출처: 필자 작성.

- 중국이 일본을 △과거사 비난 △군국주의 비판 등의 측면에서 압박하는 가운데 역내 전체를 무대로 한 '일본 고립화' 전략을 견지
 - 우리나라의 대(對)중국·일본 관련 우선순위·방침 확립이 최우선
 - 일본의 한일관계 관련 관리 필요성과 셔틀외교 유지 속내 견조, 우리의 대(對)일본 '강한 일본' 관련 대응법 구축이 향후의 과제

III 일본의 '강한 일본'과 한일관계

1. 역내 역학관계와 '강한 일본' 간 상관관계

■ 일본의 안보 위기의식 표출과 군사력 강화 의도 간 결합

- 일본의 안보 위기의식과 그에 따른 군비확대 속도가 이례적, 다만 이는 단편적 현상이라기보다 강경 보수 세력에 따른 전통적 현상
 - 일본의 재무장 시도가 보수 총리의 정략에 따른 후과인지 혹은 중국의 견제에 따른 후과인지 판단하기 모호한 상황이 계속
 -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일본의 정략적 추이가 단기간에 걸쳐 구축된 현상이 아니라 자민당의 여러 보수 총리를 관통하며 지금까지 수위의 차이만 존재할 뿐 계속되어 온 일관적 현상이라는 점
 - 실제로, 일본인의 대다수가 안보 위기의식을 체감하며 행정부의 방위력 증강 노력에 찬성 의사를 표시, 이에 최근 선거 국면에서 '강경보수' 다카이치 총리가 대승을 거두며 당선하는 결과가 발생
- 일본의 재무장 행보는 외생적·내생적 요인이 상호 간 결합한 결과, 정치권의 개헌 시도와 '강한 일본' 추진 태세 고착화 가능성 다대¹⁰
 - '강대국 간 경쟁·갈등'에 따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공간 확보의 측면에서 '정세 관련 유도·편승 행보'의 의도를 노골화¹¹
 - 즉, '강한 일본' 관련 기조·행보는 △미일동맹 강화 △대(對)중국 대응 △자민당 집권과 지지층 결집을 위한 명분 등 여러 정략적 형태를 통해 발현되며 앞으로도 견지·확대될 가능성 다대
 - ※ 일본이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2026 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을 '책임있는 적극재정' 방침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22조엔 규모로 편성, 한편 방위비는 사상 최대 약 9조엔 편성
 - 특히 중국의 대(對)일본 압박과 센카쿠열도 관련 회색지대 전술이 이어지는 이상 일본의 재무장 본격화 또한 가속·확대 가능성 다대

10 Sheila Smith, *Japan Rearmed: The Politics of Military Power* (Harvard University Press, 2019). 일본의 개헌(헌법 9조) 동향은 '과거 잃어버린 30년'으로 표현되는 장기 경제 침체와 그에 따른 위기의식으로부터 발생한 탈출 욕구의 발로이자 민족주의적 결집 현상의 결과물에 해당. 즉, '개헌'은 일본 현대사의 정치문화적 측면에서 강경보수이자 우경화를 대변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해당.

11 주동진, "한국의 지정학적 국가전략과 과제: 인도-태평양 전략과 회생양 가설," 『신아세아』 30-1 통권 114호, (2023). 국가를 '합리적 행위자(actor)'로 전제할 경우, 국가는 역내 환경에 대응해 △자국의 이익·생존을 위한 독자적 전략 수행 △역학관계에 따른 기회비용 절감과 자율적 공간 확보 등을 추구 불가피. 일본에 있어서 '책임 있는 적극재정' 기조와 '강한 일본' 행보가 이에 해당.

■ 일본의 대(對)중일갈등 관련 인식·행보 전망

-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반(反)일본 조치를 국내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한 원동력으로 활용, 이를 '안보 강화 필요성'으로 치환¹²
 - 중국과의 관계관리를 염두에 둔 미국이 공개 지지를 유보함으로써 중국의 다방면에 걸친 대(對)일본 압박·제재가 본격화·확산일로
 - ※ 특히 중국은 '하나의 중국'과 더불어 중일 4대 정치문건을 강조하며 관계 훼손의 선제적 책임이 일본에 있음을 공개적으로 비판 반복¹³
 - 반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는 대내외에 걸쳐 대(對)중국 굴복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에 '중국 동력 상실' 결과로 비화 가능
 - 이에 일본 총리는 완만한 해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접고 추동 중인 △보통국가화 전략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 △강한 일본 등에 속도, 내각·자민당의 우경화 행보에 박차
 - 즉, 중일 양국 모두 '중일갈등 종식' 관련 동기·동인 부족, 이에 '상호 간에 선제적 양보 없는 갈등·대치' 국면 존속 가능성 다대
- 일본의 전통적 미일관계를 중심으로 한 '현상유지(=시간벌기)' 노력 치열, 향후 보수 세력 내의 '매파 vs 비둘기파' 구도 부상 가능성¹⁴
 - '미국과의 입장유사국·가치공유국' 입지를 공고화하며 재무장 속도
 - 전통적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 슬로건과 '항행의 자유' 프레임을 명분으로 자국의 군사적 행보를 미국에 동조시키며 정당화·가속화 추동¹⁵

12 Diego Garzia, "The Personalization of Politics in Western Democracies: Causes and Consequences on Leader-Follower Relationships," *The Leadership Quarterly* 22 No. 4. (2011), p. 699. '정치의 사인화(私人化)' 현상은 국내 정치가 소수의 정치인·정당 등에 의해 '사적 유용'되는 상황을 의미. 한편 국내의 사회적 국면을 환기하거나 전환하는데 사용되는 기법·수단 등 또한 의미 가능.

13 '중일 4대 정치문건'은 △1972년 수교 당시 '중일 공동성명' △1978년 '중일 평화 우호조약' △1998년 '중일 평화와 발전의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을 위한 공동선언' △2008년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 전면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을 지칭. 여기에는 '하나의 중국'과 '상호 주권 및 영토 완전성 존중', '일방적 패권 반대' 등의 내용이 포함.

14 일본은 미국의 요구·동의를 바탕으로 △미일관계가 인도-태평양의 안보 중심축이자 대(對)중국 견제망의 핵심 고리임을 표명 △자위대 관련 군사력 증강에 대한 미국의 '암묵적 동의' 확보 △일본 주도의 여러 소다자 안보 협의체 활성화 △역내 '전략적 공공재' 관련 주요 공급자 지위 등극 등의 목표들을 견지·추동. 그러나 그 구체적 수준·정도에 있어 일본 내부의 '온건파(비둘기파, 미군 지원 역할 중심)' vs. '급진파(매파, 미군 의존 탈피 중심)' 구도 또한 여전. 향후 내부 균열 발생 가능성.

15 Michael J. Green and Christopher B. Johnstone, "Operationalising Japan's Security Role in Asia: A Survey of Experts in Japan,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United States Studies Centre of the University of Sydney*

- 또한 '미국 우선주의' 배경의 각자도생 행보를 전략화·실체화하는 과정에서 자위대의 해외 진출 빈도를 늘리며 자위대와 관련해 '역내 보통국가의 보통군대'라는 기반 인식의 정립·확산도 도모
 - ※ 일본은 최근 △2025년 11월 이탈리아 '망구스타 25' △2026년 1월 일본 '새해 공수훈련' △2~3월 인도 '다르마 25' △4~6월 필리핀 '살라크넵 2026' 등 해군뿐 아니라 육군의 해외 진출도 시도 중
- 결국 '대(對)중국 대비'가 전략적·전략적 명분으로 작동·내재화하는 만큼 일본의 중일갈등 장기화 국면을 감수한 미국과의 대(對)중국 견제 기조 유지 행보 관련 지속가능성 다대

2. 일본 정세와 우경화 지속가능성

■ 일본 자민당의 중의원 선거 압승과 우경화 시동 본격화

- 일본 내각의 영향력이 그 모체인 자민당의 영향력을 압도, 총리에 따른 정치적 독주·발의가 가능한 상황
 - 2026년 2월 총선에서 중의원 465석 중 개헌안 발의 가능 의석수 310석을 넘는 316석을 달성, 연정 상대 일본 유신회 포함 352석
 - 자민당의 전통적 '대(對)보수 브레이크' 역할을 담당하던 공명당 이탈, 이전보다 강경보수인 일본 유신회가 새로운 파트너로 자리
 - 2028년 중반 참의원 선거 국면까지 현(現) 흐름 지속가능성 다대
- 다카이치 총리가 2026년 4월 자민당 창당 70주년 기념행사에서 개헌논의를 본격화, 총리 지지율에 의존한 '헌법 9조 개헌'을 시동
 - 일본 총리·자민당이 2027년 개헌 발의를 목표로 '개헌 물이' 시작
 - 대(對)야당 회유를 통한 참의원 과반 확보와 국민투표 통과를 목표로 한 '자민당 2026년 운동방침'을 채택·공식화
 - 개헌을 통한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 △재무장 가속 △살상 무기 수출국 △군사적 국외 진출 확대 등의 결과들 파생 가능성
 - 향후 개헌 추진 과정에서 △전쟁·무력행사 금지 △육해공 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 등의 요소들 가운데 무엇이 소거되고 무엇이 추가될 것인지에 따라 '전략적 디테일'의 차이 발생

and CSIS Common Report (April, 2024). 일본의 △자위대·미군 간 지휘·통제 체계 일체화 가속 △핵우산 관련 약속 재도출 △동맹과의 공군·기술을 포함한 방위산업 강화 △제도권·오키나와 소재 주일미군기지 관련 재편 계획 원활화 △외교·방위 (2+2) 및 외교·경제 (2+2) 회담 지속 추구 등의 행보들이 이와 관련해 존재. 또한 일본 방위성의 △2025년 3월 '대(對)중국 억제 체제'를 위한 '통합군사령부(operational component)' 창설 및 미군과의 '지휘통제체계 일원화' 가속 △2026년 4월 '대(對)중국 견제 전담 조직'을 목표로 한 태평양방위 구상실 신설 등의 행보들도 발생·확대 한창. 특히 일본 방위성은 이러한 행보의 목적이 '대(對)북한 미사일 대응과 대(對)중국 해양 진출 대응을 위한 해양 안보 전략 강화'에 있음을 명시화.

- 단, 일본 정치권·여론 속 '총리 독주'에 대한 당혹감과 강경보수 관련 우려도 병존, 개헌 반대 집회 또한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

■ 일본 우경화 행보의 지속가능성 전망

- 최근 4월에 발표된 일본의 '외교청서 2026'에서 이전과 큰 차별성 부재, 다만 전통적인 과거사·독도·교과서 등의 민감 현안도 잔존
 - 일본은 올해도 한일 간 협력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양보·화해의 의지는 별도의 문제로 치부, 레버리지 관련 주도권의 상실을 경계
 - 일본 자민당이 2028년 중반 참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는 경우 '개헌안 발의 및 국민투표 실시' 흐름에 반복의 여지 발생 가능
 - 나아가 일본 총리·내각이 개헌 발의에 성공하면 자민당 총재선거 연승과 함께 총리의 장기 집권 가능성·안정성 또한 발생 가능
 - 문제는 이러한 가능성이 일본의 △과거사·안보·경제·기술 개별화 △분야별 회피·협력 병행 전략 등의 지속·심화도 초래할 가능성
- 최근 개헌에 대한 여론의 인식·속내와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정치권의 인식·속내가 상호 간에 결합·영향, 우리의 중장기적 대응 태세 필수
 - 일본은 대(對)미중갈등 접근법의 순조 여부와 그 실속에 집중하며 향후 대(對)중국 관계에 필요한 조치를 조정·관리해 나갈 것
 - 일본 다카이치 내각과 우경화 행보는 이미 상호 간에 일련타생의 경지에 도달, 심지어 집권·정체성의 측면에서 중도 단념도 불가
 - 특히 일본 정치권은 이미 중일갈등의 장기화를 불가피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장기전을 염두에 두며 기회요인·도전요인의 파악에 전념
 - 일본의 '대(對)미중갈등·중일갈등 관련 묵시·감내'에 유념, 일본의 양면적 여론전과 원론적 기조에 대한 단편적 일희일비 반응 금물

3. 한일관계와 협력·경쟁의 이중주

■ 한일관계 속 경쟁 유발 요인 관련 인식·경계 긴요

- 일본 내각은 정국 환경이 위축·후퇴하면 국정 동력 확보·제고의 차원에서 민족주의적·배외주의적 행보를 강화할 가능성 다대
 - 일본은 대(對)미중갈등 관련 주도권을 확보·행사하는 것이 불가한 이상 '자국 우선주의적' 역내 입지·레버리지 확보에 전념할 것

- 그러나 이는 반한·반일 기조를 촉발함으로써 한일관계 간의 우호 기조를 저해할 수 있으며 동북아 유관국들의 대(對)일본 안보적 긴장·우려를 자극하는 결과도 초래 가능, 관련 추이 주목 불가결
 - 결과적으로, 역내 주요국 간의 우호 기조 후퇴는 필연적으로 한일 서틀외교의 역할론·영향력 후퇴를 야기, 지속가능성 관련 기대를 후퇴시키며 한국 실용외교 성과의 상한선 저하 또한 초래 가능
- 미국의 대(對)한일 '안보 청구서'가 여러 분야에서 내재적으로 작용, 지정학적 자력갱생과 각자도생의 측면에서 한일 간 경쟁 격화 우려
 - (안보 현안) △북중러 삼각관계와 레버리지 감퇴 △역내 회색지대 확산 △역내 중요 해역의 갈등 △방산시장 경쟁 △전략적 유연성 관련 비용·부담 증대 △'항행의 자유' 범주 관련 인식 차이 등
 - (경제 현안) △공급망(희토류 등) 다변화 과제 △AI·조선업·반도체 △에너지(원유·원자력·LNG) 수급 △통화스와프 구축·공조 △타국 관련 경제의존도·디커플링(de-coupling) 조율 △첨단기술 선점 등
 - (외교 현안) △중견국·중재국 관련 실용외교의 난이도 점증 △역내 주도권 관련 경쟁 △대(對)북·미·중 스탠스 조율 △여러 협의체 관련 참여·소외 문제 △대(對)동남아·태평양도서국 관련 인식차 등
- 대(對)일본 전략과 동북아 전략 간 연계를 통한 '기회비용' 절감 절실
- 일본 우경화 행보 속 대(對)한국 우방 확보 시도는 전략적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레버리지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딜레마로 비화 가능
 - 2026년 5월에 제14차 한일 안보정책협의(외교·국방 2+2회의)가 '차관급'으로 격상되어 첫 개최, 한일 간 최근 현안을 모두 논의
 - 그러나 과거 중단·재개 이력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명확한 성과 도출에는 실패, 일본의 '자국 요구에 따른 반대급부' 불투명 재발
 - 우리나라가 일본에 있어 불가결한 소통 대상국인지 혹은 레버리지 확보 수단에 불과한지 주요 국면마다 판단·구별하는 것이 난제
 - 미중일 3국의 동상이몽 속 상호 간 회유·견제 관련 시도에 대한 대비 긴요, '한일관계 관리' 카드가 이를 위한 레버리지임에 유념
 - 현재 기회비용 관련 전략적·효율적 사용이 국익과 직결되는 가운데 한일관계 관련 중장기적 통합전략 구축 필요성이 갈수록 부상
 - 향후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 및 Tit-for-Tat'의 순환구조 유력, 지정학적 역학관계와 국제 갈등 추이에 따른 변동성 고조에 대비

- 갈등의 범주가 점차 '경제안보→기술안보'로 확산하며 외교·안보 관련 갈등의 지속성·휘발성을 지 정확적 배경에서 지탱
- '전략적 부담의 재분배'가 다방면으로 발생·요구되는 가운데 역내 대(對)미중갈등 관련 중견국 연 대전략 구축 필요성이 갈수록 고조
- 우리나라의 대내외 상황관리를 통한 '전략적 비교우위' 지위 견지 중요, 일본의 우경화 행보가 유발할 수 있는 여파·리스크에 대한 경각심 유지와 진영논리 관련 출구전략 구비 불가피성에 초점

IV 결론 : 한일관계 관련 기회요인과 도전요인

- (기회요인) △미중갈등 △중일갈등 △군사력 강화 시도 등으로 인한 일본의 '유사입장국 가치공유국 확보' 관련 위기감 상존·고조
 - 실용적 한일관계를 목표로 삼은 대(對)한국 유인 시도 증가, 양국 간 셔틀외교를 통한 지지 유도과 리스크 회피 노력 견지 필요
 - △반도체 △해운·조선 △공급망 △인적 교류 △원유·원자력·LNG △ODA 등 경제안보·기술안보 측면에서 상호 협력 가능성 모색
 - 일본의 외교적 고립 가능성 관련 우려에 따른 대(對)중국 견제와 한중관계 밀착 경계, 이는 중일 간 전략적 레버리지 확보의 기회
 - △경제협력회 △경제인회의 △의원연맹 등 민간외교·의원외교 적극 활용, 유관 협의체·파트너십 기능 관련 점검·활성화 단계적 추진

- (도전요인) 일본 정부의 국정 동력 확보·견지를 위한 '강한 일본' 관련 우경화 기조가 한일관계 간 공조·회복 탄력성을 저해 가능
 - △역내 도서 재무장 계획 △정보·감시 강화 △자위대 해외 진출 △방위산업 부활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자위대 재편 △개헌 등의 시도 활발, 이에 외교·안보적 민감성의 발생 가능성 점증 중
 - 일본의 '강한 일본' 정책은 우경화 기조 속 '보통국가화' 전략을 위한 수단으로 민감 현안과 수시로 직결되는 휘발성을 발휘 가능
 - 한일관계를 위한 여론적 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수시로 정략적 딜레마와 난국·혼선 초래 가능, 배외주의 확산 등에도 경계 필요
 - 한일관계 속 단기적 부침에 구애받지 않을 '대(對)일본 전략' 필요

-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적 공간 속 역할·기회를 구체화하고 역내 정세 관련 단면적 대응을 지양하며 중장기적 Agenda-Setting에 전념
 - Agenda-Leading과 질서 재편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부응·관여, 우리나라의 연루 리스크 회피와 전략적 레버리지 제고에 노력
 - 국가의 전략적 비전·방법론 등과 관련해 타국과의 소통·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평행선·이견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소하는데 노력

- △전략적 자율성 △동맹의 현대화 △전략 공간 규정 등에 있어서 중견국 연대 외교 기조 속 '전략적 명확성'의 개념화를 시도·표명
- 지정학·경제안보·첨단안보·전통안보 분야 간 융합·연계 프레임워크 설계·구축 긴요, 범정부 위기 관리 시스템의 '주기적 갱신' 제도화
- 외교·안보적 공간 확충을 위해 '동북아'라는 지정학적 제약·편향성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나라만의 유연성과 개방성을 설정·건지
 - 중장기적 국가전략을 위한 접근법의 측면에서 한미일 공조·연대를 자산으로 한 'G7+IP4' 청사진을 공동의 목표이자 과제로서 유도
 - 전략적 인내·모호성 견지를 가능케 하는 전략적 내구성을 강화, 지정학적 연쇄·연루에 대비해 국제법 등 정략적 명분 선제적 구비
 - 우리나라의 '실용적 공간' 구축을 위한 AUKUS·QUAD·CPTPP 등 아직 미가입 상태인 역내 협의체들 관련 신규 가입·연대 확대
 - 해당 협의체들 모두 일본과의 셔틀외교를 통해 '물꼬' 마련 가능, 자주적 의제 선점·주도를 통한 국가의 전략적 기회비용 절감 도모

참고문헌

- 주동진. “한국의 대북정책과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 『국제정치논총』 58-4 (2018).
- _____. “한국의 지정학적 국가전략과 과제: 인도-태평양 전략과 희생양 가설,” 『신아세아』 30-1 통권 114호. (2023).
- _____. “센카쿠열도와 美-日-中 삼각관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략보고」 통권 327호 (2025년).
- Brands, Hal. and John Lewis Gaddis. “The New Cold War: America, China, and the Echoes of History.”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2021).
- Cristenson, Thomas J. and Jack Snyder. “Chain Gangs and Passed Bucks: Predicting Alliance Patterns in Multipolar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4 (1990, Spring).
- Dittmer, Lowell. “The Strategic Triangle: An Elementary Game-Theoretical Analysis.” *World politics* 33-04 (Jul., 1981).
- Garzia, Diego. “The Personalization of Politics in Western Democracies: Causes and Consequences on Leader-Follower Relationships.” *The Leadership Quarterly* 22-4 (2011).
- Green, Michael J. and Christopher B. Johnstone. “Operationalising Japan’s Security Role in Asia: A Survey of Experts in Japan,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United States Studies Centre of the University of Sydney and CSIS Common Report* (April, 2024).
- Greenhalg, Leonard. “Managing Conflict.” *MIT Sloan Management Review* 27-3 (1986).
- Liff, Adam P. and John G. Ikenberry. “Racing toward Tragedy? China’s Rise, Military Competition in the Asia Pacific, and the Security Dilemma.” *International Security* 39-2 (2014).
- Pants, Harsh V. “The Moscow-Beijing-Delhi ‘Strategic Triangle’: An Idea Whose Time May Never Come.” *Security Dialogue* 35-3 (2004).
- Smith, Sheila. *Japan Rearmed: The Politics of Military Power*. Harvard University Press, 2019.
- Walt, Stephen M.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U.S.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ecurity Strategy*. 2019.

_____.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Annual Report to Congress* (2024).

_____. *National Defense Strategy 2026*. 2026.

U.S. State Department.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 2019.

U.S.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25*. 2025.

Abstract

South Korea and the Strategic Triangle in Northeast Asia: Focusing on China–Japan Conflicts and ‘Strong Japan’

Joo, Dong-Jin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From a mid-to-long-term perspective, South Korea needs to focus on △ recognizing Northeast Asia as a structural framework △ understanding the mechanism of ‘Strategic Triangle’ within that structure △ deriving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Strategic Autonomy’. Now, amid persistent US–China conflicts and China–Japan conflicts, the Middle East crisis has also overlapped. So our concerns and tensions regarding regional security and geopolitical balance are growing. In fact, the United States is pushing for strategies based on ‘Western Hemisphere’ and ‘Spheres of Influence’, demanding that allies and partners share the burden and agree to ‘Strategic Flexibility’. Next, China is focusing on rallying anti-Western forces, including the Global South, while striving to establish and enhance its regional leadership. Furthermore, in relation to China–Japan conflicts, Japan is expanding its internal and external leverage with the US–Japan alliance as its foundation, accelerating its ‘Strong Japan’ move by taking this as an opportunity. In particular, Japan’s ‘Strong Japan’ pursuit could escalate into a dilemma for Korea–Japan relations in terms of its content and political implications. Our attentions are required.

Attempting to maintain and drive friendly relations with Japan, on the US–Korea–Japan and Korea–China–Japan trilateral frameworks, is certainly a valid choice from the traditional and continuous perspective. However, its sustainability is not automatically guaranteed. We must bear in mind that we are currently facing challenges such as △ the dispersal of US forces △ the expansion of China’s regional influence △ Japan’s evasion of history issues and attempts to revise its constitutions. For our consistent and strategic moves, we must take contemplation deeply and quickly. By utilizing Korea–Japan relations and ‘Shuttle–

Diplomacy', it is hoped that Korea can achieve significant results in △ managing and overcoming risks related to US-Korea and China-Korea relations △ securing strategic leverages △ pursuing strategies for the solidarity between middle-powers.

Keywords: China-Japan Conflict, US-China Conflict, Japan's Rightward Shift, Strategic Triangle, Middle-Power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INSS

전략보고

June 2026
No. 385